
반란, 진보주의, 그리고 도덕 경제: 지난 20년의 아르헨티나 중산층

토비아스 부스¹⁾

비엔나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원제와 출처: Tobias Boos, “Rebelión, progresismo y economía moral. La clase media argentina en las últimas dos décadas”, *Nueva Sociedad*, No. 285, enero-febrero de 2020, pp. 84–96.

핵심어: 중산층, 키르츠네르주의,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시대가 도래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산층의 시대란 적어도 중산층이라는 주제를 다룬 학술적인 글들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서적과 연구물들은 (새로운) 글로벌 중산층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세계개발 기구들이나 세계은행 같은 기관의 연구서들은 중산층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아카이브를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이 주제를 다룬 출판

1) 저자는 라틴아메리카 중산층과 포퓰리즘, 정치경제, 국가 이론 등을 연구하며, 특히 사회구조와 정치적 정체성의 연관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산마르틴 국립대학의 마리아 시빌라 메리안 라틴아메리카 고등연구센터(Centro María Sibylla Merian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Avanzados)에서 진행 중인 “논란의 중산층: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중간층을 둘러싼 담론과 정체성”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다.

물의 양이 지난 10년 동안 역사적인 정점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²⁾ 21세기는 중산층의 세기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인가? 예란 테르보른은 『뉴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에 실린 논문에서 그렇게 자문하고 있다.³⁾

라틴아메리카도 이러한 인식의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2014년 당시 세계은행장이던 짐 용 김(Jim Yong Kim)은 라틴아메리카가 마침내 중산층 지역이 되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아도 중산층이라는 주제는 수년 전부터 하나의 ‘컴백’ 현상임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복귀 현상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소위 진보 정부들이 늘어난 것과 일치한다. 브라질에서는 노동자당 정부 하에서 새로운 소비 중산층을 장려하는 정책이 준 국가 교리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시위가 불붙던 시점에는 노동자당 정부와 대립하는 중산층이라는 관념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콰도르에서도 라파엘 코레아 정부가 집권 초부터 능력주의 사상에 호소했고, 이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한편, 어떤 국가들에서는 진보주의 정부에 반하는 중산층이라는 관념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2019년 볼리비아 대선 캠페인에서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중산층에 대해 “다시 사랑에 빠져야 한다”(hay que volver a enamorarse)는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암시를 했다.

아르헨티나는 어떤가? 아마도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산층과의 관계가 가장 복잡하고 모순적인 나라로, 최근 20년 동안의 선언들을 보면 한결같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 네스토르 키르츠네르는 2005년에 중산층은 ‘절대적으로

2) 세계은행의 아카이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 주제를 다룬 출판물은 145편이다. 비교하자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총 82편이었다.

3) G. Therborn, “Las clases sociales en el siglo XXI,” *New Left Review*, No. 78, 1–2/2013.

노동자 계층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⁴⁾ 한편 정권을 이어받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2009년 중산층이 대중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적 식민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면 자신이 태생적으로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말하곤 했다. 게다가 세계 기구들의 중산층 담론을 소환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이웃 국가들의 정상들 앞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지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더욱 난해했고, 분석가들조차 그 시기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역할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어떤 이들은 불만을 품은 반대중적인 중산층이라는 관념이 확고한 상태에서,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당선이 중산층의 설욕전이라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키르츠네르주의 정부들을 일종의 페론주의 또는 '중산층'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이들도 있었다.⁶⁾

수행 범주로서의 중산층

라틴아메리카의 중산층 담론들은 다양한 주인공들을 통해 조성되었는데, 시기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사용하는 주체와 별개로 보기 어려운 일련의 관념들을 상기시키기 때문

4) "Palabras del presidente Néstor Kirchner en el acto de firma de convenios con la Cooperativa 25 de Marzo", 11/10/2005, <www.casarsosada.gov.ar/informacion/archivo/24829-blank-5705506>.

5) "Inauguración de la muestra Día de la Lealtad, 17 de octubre", 9/10/2009, <www.casarsosada.gov.ar/informacion/archivo/21478-blank-15851578>.

6) Juan Ciucci, "El kirchnerismo es el peronismo de las clases medias", entrevista a Carlos Altamirano en *Agencia Paco Urondo*, 13/9/2013; Maristella Svampa, *Debates latinoamericanos: indianismo, desarrollo, dependencia y populismo*, Edhasa, Buenos Aires, 2016.

이다. 즉, 중산층에 호소하는 것은 종종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정치 담론들이 매우 수행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점은 학문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예시는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그렇고 ‘포폴리즘’이라는 표현도 그렇다.

‘중산층’은 의심의 여지없이 고도로 수행적인 범주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의 선거에서는 중산층을 사회 동력이자 강화되어야 할 사회 계층으로 소환하지 않고 선거전을 펼치는 후보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은 중산층이 국가 자체의 본질적인 구성 주체이자 건국 신화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한편 유럽은 수십 년 전부터 전통적인 정당들이 자신을 더 이상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의 상이한 양극단의 표현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을 이테올로기 지도에서 ‘중도주의’ 포지션과 연계된 신화적 위치의 진정한 대리인으로 설정하고자 애를 쓴다.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역사』(*Historia de la clase media argentina*)의 저자인 역사가 에세키엘 아다모프스키는 중산층이라는 범주의 수행적인 작용에 관해 명석한 고찰을 제시했다.⁷⁾ 아다모프스키는 중산층이라는 범주가 어느 행위자를 사회의 가상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지리적 은유’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가 고찰한 대로, 이 가상의 중심이 위치할 양쪽 끝이라는 건 명백하지 않다. 게다가 한 사회의 ‘중심’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라는 가장 전반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medio)’이라는 은유는 사회적 포지셔닝과 정치적 관점을 뒤섞는 섬세한 퍼포먼스적인 작용을 보여준다. 가령 독일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뮐클러는 정치적 양극단이 과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간/중심(medio/centro)이라는 것은 ‘강하게 위협받는 장소’가 되었고, ‘정치적 중심을 지키

7) E. Adamovsky, *Historia de la clase media argentina. Apogeo y decadencia de una ilusión, 1919-2003*, Planeta, Buenos Aires, 2012.

고 싶은 사람은 사회적 중간 지점을 유지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이렇게 둘을 비교하는 동일화 관점은 정치 철학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즉, '중간 지점은 사회적 응집성이나 정치적 균형성과 동일한 것으로 상상되었고, 따라서 사회의 '중간'이라는 은유적 위치의 소유자, 즉 중산층은 사회적, 정치적 중도의 화신이었다.'⁹⁾

'중산층'을 정치적으로 균형 잡히고 민주주의 가치를 추동하는 더욱 공정한 사회의 지표로 보는 이 관념은 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이다. 경험적 뒷받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념이 유지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라틴아메리카와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우리는 역사의 특정 시점에 중산층이 가장 잔인했던 독재 정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호세 누은 중산층의 쿠데타를 다룬 저명한 에세이에서 이 점을 제기하고 있다.¹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새로운 글로벌 중산층이 여타 사회 계층보다 더 민주적 신념이 있다거나 정치적 관점이 더 신중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 연구들도 중산층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최근 연구들도 중산층을 민주주의 주체로 보는 믿음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는 중산층이 정치적 대립축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가설을 설정하는 대신, 지난 20년 동안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해하는 바, 중산층의 동원, 사회구조 내의 변화, 중산층의 소위 '소비 협약'으로의 통합 등을 다루는 이 일련의 해석은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수수께끼를 풀어낸다기보다 이들의 양면성을 이해하기 위한

8) H. Münkler, "Die Mitte, ein hochgradig gefährdeter Ort", *Süddeutsche Zeitung*, 23/6/2016.

9) E. Adamovsky, "Aristotle, Diderot, Liberalism and the Idea of 'Middle Class': A Comparison of Two Contexts of Emergence of a Metaphorical Formation",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26 No 2, 2005.

10) J. Nun, "América Latina: la crisis hegemónica y el golpe militar", *Desarrollo Económico*, vol. 6 No 22/23, 1966.

몇 가지 키워드를 제공해줄 것이다.

중산층 사회·정치적 동원의 징후 변화

최근 수십 년의 가장 흥미로운 연구들은 중산층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그리고 경제적) 구분의 시도를 포기하고,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주관성과 자기인식에 주된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일상의 관행들이나 구분선을 재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정체성으로서의 중산층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¹⁾

아르헨티나 사례는 특히 이러한 성격의 관점에 적합해 보인다. 중산층 국가로서의 아르헨티나라는 신화는 국가적 정체성과 결합되어 있다. 모든 연구들은 중산층과의 주관적 자기동일시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자기동일시가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2014)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57.8%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2년에는 그 수치가 69.9%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헨티나인들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질문한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arómetro)의 조사와 같은 여러 설문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라티노바로메트로는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평균 83.6%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비율에는 세계의 중산층 하위 범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퍼센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퍼센티지 수치 외에 도출된 흥미로운 결론은 라틴아메리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이러한 중산층 자의식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11) Sergio Visacovsky, "Estudios sobre 'clase media' en la antropología social: una agenda para la Argentina", *Amé*, No 13, 2008.

데이터다.

구성주의 이론의 흐름은 2001년 디폴트 위기와 그 이후 몇 년 동안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학술 논쟁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¹²⁾ 당시 중산층은 진정한 ‘중산층 반란’에서 정치적으로 동원된 가시적 주역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반란’은 다니엘 오사로우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거론한 용어로, 2001년 당시 폐소화와 미 달러화 간 1대 1 태환정책이 수명이 다한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페르난도 델라 루아 정부가 법령화한 ‘지급유예’ 법령에 반대하여 사용했다.¹³⁾

오사로우의 관점은 최근 20년간 중산층이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 관점을 통해 중산층의 정치적 요청과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 계층을 뛰어넘는 연대의 양상을 특징으로 했던 2001~2002년 반란의¹⁴⁾ 불꽃이 어떻게 서서히 사그라들었는지, 그리고 보수적이고 나아가 복고적이기까지 한 징후를 띤 또 다른 종류의 응집과 동원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응집과 동원에서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식되던 (불)확실성이나 거부와 같은 화제들이 다시 소환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이 사회·정치적 동원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다시 말해 중산층의 정치세력화라고 해석될 수 있는 현상이 양산되었던 키르츠네르 집권기를

12) 이러한 논점 설정은 2004년 일군의 연구 그룹의 형성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1~2017년에 사회연구센터-경제사회발전연구소(CIS-IDES: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ales-Instituto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가 진행한 중산층 연구프로그램(Programa de Estudios sobre Clases Medias)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IDES는 19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설립된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이고, CIS는 2013년 정부 주도 연구기관 CONICET 산하에 설치된 연구센터다. 현재 CIS는 CONICET과 IDES 두 기관 부속기관으로 공동 운영하는 연구센터다(역주).

13) D. Ozarow, *The Mobilization and Demobilization of Middle-Class Revolt: Comparative Insights from Argentina*, Routledge, Nueva York, 2019.

14) 예를 들어, 피케테로들(도로를 점령하던, 토지 기반의 사회운동)과, 지역 동네에서 냄비 시위(cacerolazos)와 집회를 조직하던 중산층 사이의 결합이 그렇다.

세 개의 사이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2004~2006년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악셀 블룸베르그(Axel Blumberg)의 납치와 암살에 연계된 시위가 있었다. 둘째, 2008년에는 정부와 농업 부문 사이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회·정치적 동원이 있다. 끝으로 2012~2013년, 광범위한 사항들을 주장했지만 무엇보다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를 거부한다는 공통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동원이 존재했다. 사회·정치적 동원의 기폭제로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외환거래 통제’(cepo) 등 경제적 상황도 작용했지만, 부패와 같은 문제들도 중요했다. 부패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건은 2012년 ‘온세 역의 비극’이었는데¹⁵⁾, 이 사건은 부패라는 화제를 공론화 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키르츠네르주의 3기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개혁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중산층의 자각이 커져갔다. 그러자 2012~2013년에 등장한 세 번째 사이클의 운동세력은 ‘k 부패’(korrupción, corrupción k)를 고발했고, 특히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모습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크레틴병 환자’라고 부르곤 했다.¹⁶⁾

중산층의 자기표현이 되살아난 네 번째 사이클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 때였다. 2016년 7월 도시 지역에서 전기, 가스, 교통 등의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여 소위 ‘노이즈 시위대’를 통해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마크리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사회·정치적 동원은 중산층의 동원으로 해석되는 경향은 아니었다. 중산층 운동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러한 동원은 두 가지 약점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동원된 이들 스스로 자기규정한 관념을 비판 없이 채택할 위험성이 있다. 즉, 중산층과 민주주의의 소명을 결합하고자 했고, 스스로를 ‘민주주

15) 2012년 2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온세 역에서 지하철 사르미엔토 노선 열차 사고로 인해 51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 부상자가 생긴 사건이다.

16) kretina는 스페인어 cretina와 키르츠네르주의 k를 합쳐 만든 단어이다(역주).

의자라고 주장하는 편향이 생겨났다. 그리고 역사적 반페론주의의 관점에서, 키르츠네르주의 정부를 반민주주의라고 거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키르츠네르주의 정부가 추진했던 헤게모니 통합의 시도와 그 양면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접근방식이 초래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 접근방식에서는 중산층이 동원되는 예외적인 시기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동원 징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페론주의와 반페론주의 사이의 오랜 경계선이 중심축의 하나로 재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적으로 정치적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만 그렇다. 정치적 견해는 공개된 적극적인 지지나 거부보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작동하는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은 별로 위협성이 없는 듯하다. 즉 사회적 동원의 관점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지지나 거부의 형태와 이유를 밝힐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마다 역할을 하는 ‘고요한’ 동력이 있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주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관리자 계층과 국가적 호전성

중산층에 대한 고전적인 접근법은 직업이나 경제 활동 분야의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아르헨티나 사회과학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것으로, 1942년 지노 제르마니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중산층. 예비 연구』와 같은 고전적인 연구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르마니의 연구들은 중산층 국가로서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정치적 신화를 수립했다. 여기에서 제르마니의 데이터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의 광범위한 정치적 결론들을 문제제기한 아다모프스키의 엄격한 고찰을 다시 한 번 추천할 만하다.

이 접근법에 따른 연구들은 (하위) 중산층을 2001년 이후 사회구조에서

역동적인 한 축으로 진단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 중산층 세력은 급속한 확장을 경험했고 사회구조에서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사무직 봉급자들, 국가 기술직 또는 전문직 관료들, 보건, 교육, 연구 분야 종사자들이 2003년 이후 성장한 계층이다.¹⁷⁾ 그러나 이 변화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2기 정부에 와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위 연구들은 서민층과 중산층을 구분하기 위해 전적으로 경제적 기준에 의존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어떤 분야의 활동과 직업군이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은 내릴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가가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 국가적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룹들이 증가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와 정치적 행동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을 하게 된다. 존 에렌라이히와 바버라 에렌라이히 부부는 1970년대 미국의 사례를 놓고 ‘전문가-관리자 계층’(professional-managerial class)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다. 이 계층은 국가의 확장과 20세기 초 진보주의 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고 1960년대에 헤게모니를 차지한 부문을 말하고 있다. 저자들은 ‘전문가-관리자 계층’이라는 표현에 공무원, 교사, 문화 제작 부문 종사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확장과 연관된 모든 사회단체, 문화단체, 교육단체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적 용어상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개념이 지닌 풍부한 측면은 정치적 연결성을 깔고 있는 가설이라는 점이다. 에렌라이히 부부는 전문가-관리자 계층의 주된 기능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적, 문화적 통제

17)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것. Gabriela Benza, “La estructura de clases argentina durante la década 2003-2013”, Gabriel Kessler (comp.), *La sociedad argentina hoy: radiografía de una nueva estructura*,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16; Héctor Palomino y Pablo Dalle, “Movilización, cambios en la estructura de clases y convergencia de ingresos en Argentina entre 2003 y 2013”, *Realidad Económica*, vol. 56 No 218, 2016.

를 수행하여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이런 의미에서 마리스텔라 스밤파가 사용한 ‘중산층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은¹⁹⁾ 과장일지도 모른다. 키르츠네르주의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용어를 통해 우리는 키르츠네르주의 정부 집권기에 일부 중산층이 보여준 국가적 호전성(militancia estatal)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중산층의 물질적 향상(일자리, 장학금, 급여 인상 등)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진보적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과 그 시기 동안 펼친 투쟁의 유형들도 설명해주고 있다.

소비 협정과 중산층의 도덕 경제

중산층의 범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의는 아마 라틴 아메리카 중산층의 상승을 전제로 해서 국제기구들이 만든 정의일 것이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9년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중산층은 50% 성장했고, 1억 5200만 명을 넘어섰다. 아르헨티나는 중산층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선두그룹 국가에 속한다.²⁰⁾ 세계은행 보고서는 소득을 근거로 삼아, 1일 10~50달러의 구매력 평가 지수를 중산층의 정의로 삼았다. 경제학자들이 사용한 정의의 자의성은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²¹⁾ 게다가 라틴아메리카 중산층의

18) B. Ehrenreich y J. Ehrenreich, “The Professional-Managerial Class”, Pat Walker (comp.), *Between Labor and Capital*, South End Press, Boston, 1979.

19) M. Svampa, ob. cit.

20) Francisco H. G. Ferreira, Julian Messina, Jamele Rigolini, Luis-Felipe López-Calva, Maria Ana Lugo y Renos Vakis, *La movilidad económica y el crecimiento de la clase media en América Latina*, Banco Mundial, Washington, DC., 2013.

21) E. Adamovsky, “Clase media: reflexiones sobre los (malos) usos académicos de una categoría”, *Nueva Sociedad*, No 247, 9-10/2013, disponible en <www.nuso.org>.

성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국가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계층이라는 용어를 제거한다면 소득수준에 관한 데이터들은 하나의 출발점으로 유효하다.²²⁾ 이제 아르헨티나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볼도록 하겠다.

2003년부터 시작된 키르츠네르 정부에서 실질 임금이 증가했으며, 특히 민간 부문에서 이러한 증가가 분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균소득은 2001년 경제 위기 이전의 소비 수준을 회복했고, 때로는 그 수준을 상회했을 수도 있다. 가장 유의미한 개선들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집권 1기에 목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개선을 키르츠네르 1기에 국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후자의 태도는 중산층의 성격이 키르츠네르 집권기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집권기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분석들에서 자주 나타나곤 한다. 2008년의 제한적 성장(4.1%)과 2009년의 하락(-5.9%) 이후 2010년, 2011년에는 강력한 경제회복이 특징이었다. 당시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국립 통계조사원의 수치가 수정된 지금에 와서 보면, 2009년의 하락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교적 잘 피했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다. 쇼핑물 판매량과 신차 판매량 기록, 해외여행 수치 등이 그러한 인식의 상징적인 예다. 이러한 수치들은 2년 동안 중산층과 상류층의 높은 소비 수준이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2012~2013년에는 소비 수준이 정체되었지만 키르츠네르 집권 1기와 2기의 혜택은 대부분 유지되었다.

이렇게 정체를 겪다가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소비 수준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연구진흥센터는 마크리 정부(2015. 12~2019. 12)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고 밝혔으며, 2019년 2월까지 민간 부문에서는 12.1%, 공공 부

22) 다음과 같은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Nancy Birdsall, "A Note on the Middle Class in Latin America", *Working Paper*. No 303,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ashington, DC., 2012.

문에서는 19.1% 하락이 있었다.²³⁾ 2016년 초 공공서비스 보조금의 전면적인 삭감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국영은행장으로 임명된 경제학자 하비에르 곤살레스 프라가가 사용한 유명한 문장이 4년 내내 강령 프로그램처럼 자리잡았다. 그는 2016년 당시에 말하기를, 2003년부터 중산층은 “자기 자신을 휴대폰, 플라즈마 TV, 자동차, 오토바이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데 급여를 소비하는 평균적인 직장인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했다.²⁴⁾

2003년 이후 등장한 중산층의 물질적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 ‘소비 협정’이라는 표현이 제기되었다.²⁵⁾ 그러나 이 표현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오히려 경제 안에 존재하는 정치적 차원을 겨냥하고 있다. 즉 E.P. 톰슨의 유명한 개념을 빌리자면, 바로 ‘중산층의 도덕 경제’라고 부르는 바를 짚고 있는 것이다. 이 영국 역사학자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기근으로 인한 폭동의 기저에는 물질적 필요성을 넘어서서, 공정한 경제와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 규범과 가치 체계에 대한 요청이 숨어있었다.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중산층의 도덕 경제’라는 관념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 경제’라는 표현은 중산층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일상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진보 정부들의 문제는 2013년 이후 발생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기인한다. 천연자원 수출로 인한 소득 감소 때문에, 정치적 국면이 허용하는 운영의 여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혹독한 경제

23) CIFRA, *Informe sobre situación del mercado de trabajo*, No 6, 2019.

24) “González Fraga: ‘Le hicieron creer a un empleado medio que podía comprarse celulares e irse al exterior’”, *Infobae*, 27/5/2016.

25) T. Boos, “Pact of Consumption—Kirchnerism and the Argentinian Middle Class”, *Austrian Journal of Development*, vol. 33, No 4, 2017.

지표들만으로는 키르츠네르주의 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반응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한 사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경제 모델의 구조적 문제들, 즉 원자재 붐의 종료, 에너지 적자, 외부의 제약 등이 2012년부터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채택한 경제적 조치들의 효과는 중산층의 생활방식에 가장 견고하게 자리잡은 핵심 정체성에 대해 특히 영향을 미쳤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소위 ‘외환거래 통제’(CEPO: 달러 매입을 제한한 정책)였다. 도덕 경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외환거래 통제는 중산층에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자 글로벌화된 세계로부터의 고립으로 해석되었다.

중산층 도덕 경제의 또 다른 예는 수입 브랜드 제품의 소비다. 1990년대의 문화와 아르헨티나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혼합되어 수입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중산층의 가용자산 규모와 세계화된 소비 기준은 지금도 중산층 소비자 정체성의 중요한 특징이다.²⁶⁾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적 도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국립 통계조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수입 소비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수입의 11.1%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수입 규제는 이러한 소비재에 특히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와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불법 개입으로 해석되었다. 2012년과 2013년 도시에서 일어난 사회적 동원은 일상적인 수준에서 경제의 정치화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 표현이었다.

둘째,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은 1990년대 이후 도덕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키르츠네르주의 정부들에서도 유지되었다. 대체로 이 말을 소비에 대한 비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 복지와 개선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베로니카 가고가 ‘소비를 통한 시민권’이라고 표현한 것의 연장선이

26) Ulrich Brand y Markus Wissen, *Imperiale Lebensweise: Zur Ausbeutung von Menschen und Natur in Zeiten des globalen Kapitalismus*, Oekom, München, 2017.

다.²⁷⁾ 중산층의 도덕 경제라는 관점은 2015년 선거전에서 마크리의 ‘우리 변함시다’(Cambiamos)라는 제안이 지닌 매력을 설명한다. 경제 정책의 ‘탈정치화’에 대한 약속, 소비자 자유를 권리로 인식하여 되돌려준다는 약속(국가는 소비 영역에서 개인의 발현을 위해 자유로운 선택과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약속)은 좋은 정부의 도덕 경제나 경제 작용에 관련된 관념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의 이유는 오로지 포퓰리즘적 비정상성 때문이어서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던 마크리의 주장은 ‘정상적인’ 경제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었다. 새로운 신뢰와 존중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약속하는 ‘세계로의 복귀’에 관한 선언들도 도덕 경제라는 키워드를 적용해 읽을 수 있다. 한편, 외환 시장의 자유화는 개인의 실질적인 경제 가능성을 넘어서서, 키르츠네르주의 시대의 억압적 제한과 대비되는 자유의 환상을 충족시켜 주었다.

일상생활의 경제적 우려들을 박멸하겠다는 약속이나, 열망하던 국제 소비 기준에 접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후 마크리 정부에 대한 환멸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2019년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나 외환 통제의 복귀는 치명적이고 상징적인 패배였다. 그 현상들은 바로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도덕 경제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 보이는 바와 같이 이번 페론주의 정부가 아르헨티나 중산층을 유혹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다면, 향후 몇 년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현 정부의 관건은 중산층의 도덕 경제와 균형을 이루고 온건한 진보주의를 취하는 동시에, 반페론주의 정체성이라는 지속적인 특징을 이겨내는 일일 터이다.

조영실 옮김

27) V. Gago, “Financialization of Popular Life and the Extractive Operations of Capital: A Perspective from Argentina”, *South Atlantic Quarterly*, vol. 114, No 1, 2015.